

북한의 개혁·개방, 베트남 보다 험로 예상되는 이유



[전광우·손현덕 통쾌한 경제-73] 요즘 북한 관련 뜨거운 화두는 비핵화와 함께 '베트남 모델'인 듯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경제발전 모델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주 평양에 이어 방문한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미 작년 저희 칼럼('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을 주목하는 진짜 이유 ; 2017년 7월 14일자)을 통해 1986년 도입된 베트남의 '도이머이'(Doi Moi)로 불리는 개혁개방 정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현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베트남식 경제발전을 집중 거론하는 배경에는 오랫동안 미국과 적대관계였던 베트남이 1995년 미국과의 수교를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삼았던 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1당 공산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세계 냉전체제 이후의 국제질서와 규범을 준수한 결과 국제사회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았고 이 덕분에 경제발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또 다른 메시지일 것입니다.

미국의 베트남 모델 언급은 북한과 중국의 특수관계에 대한 경계로 읽히기도 합니다. 남중국해 갈등에서 보여주듯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당당하게 제 목소리 내는 주변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실질적 후견인으로 삼은 북한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무역수지 불균형은 물론 첨단기술 복제나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를 빌미로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베트남 성공 모델의 핵심 동력인 해외직접투자(FDI) 통계를 보더라도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입니다. 나아가 베트남 경제기적을 촉진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가입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일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발전이 베트남보다는 험난할 것이라는 해외 언론 분석이 눈길을 끕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베트남 성공 모델의 북한 적용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첫째 이유로 베트남에 비해 북한은 공산주의 의식에 더 깊게 젖어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은 자유진영에 속했던 남부지역의 영향으로 공산당 집권 이후 신속하게 사유재산제와 기업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장마당을 통한 일부 기업형 활동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매우 초보 단계입니다. 둘째로는 북한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베트남이나 중국의 경우 각각 1980년대와 1970년대 후반 대부분의 인구는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시장경제개혁을 통해 급속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값싼 노동력 공급으로 수출산업 성장을 견인한 것과 대조됩니다. 셋째는 북한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단계의 국민 평균 나이가 20세로 매우 젊었지만 북한은 이미 34세에 달해 아직도 20대에 머물고 있는 현재 베트남보다 인구분포가 노화된 구조입니다. 북한의 딜레마는 절대빈곤을 탈출하기도 전에 고령화에 직면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애깁니다.

북한 문제 권위자로 꼽히는 마커스 놀런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오늘날 북한 경제는 구소련연방 붕괴 직후의 동유럽 국가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혁개방 전략이 성공하려면 국유화된 산업체제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한데 이는 자칫 대량실업이나 부패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두어 달 전 국제 콘퍼런스에서 대담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저에게 이런 얘길 전해줬습니다. "독일 통일 시 동독은 이미 상당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 전환비용이 엄청났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경우 향후 경제개발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힘들고 먼 여정일수록 북한은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개혁개방의 길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국민연금 이사장]